



IMF, ECB에 그리스 정부부채 문제 확대를 막기 위한 손실 분담 촉구

채원영 연구원

- IMF는 그리스 국채 손실 분담 협상과 관련해 “민간과 공공부문 참여의 불균형이 우려스러운 문제”라며 ECB를 비롯한 공공부문의 그리스 국채 손실 분담 참여를 촉구하였음.
- IMF는 “민간 채권단의 부담만으로 그리스 국채를 지속 가능하도록 회복시키는 것이 불충분하며 ECB와 각국 정부 등 공공부문 채권단들도 보유하고 있는 그리스 국채에 대해 손실 분담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 ECB는 지난 2010년 그리스 국채시장 붕괴를 막기 위해 그리스 국채를 액면가보다 싸게 매입했고, 그리스 은행권에 대출을 해주면서 그리스 국채를 담보로 받아 단일 채권자로는 최대 규모인 400억 유로(약 58조 7천억 원)에 이르는 그리스 국채를 보유하고 있음.
- ECB가 보유하고 있는 그리스 국채금리는 7%가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만기 때까지 그리스가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지지 않는다면 ECB는 큰 투자 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됨.
- 반면 그리스 정부와의 채무재조정 협상에서 민간 채권단은 최소 50~70%의 손실률을 감내해야해 ECB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왔음.
- 또한 민간 채권단이 이 같은 손실을 감당하면서까지 자발적으로 국채 교환 협상에 참여하는 사례가 많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음.
- 따라서 IMF는 단일 채권자 중에 국채 보유량이 가장 많은 ECB가 자발적인 형식으로 손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버리고 일정 정도의 그리스 국채 손실 분담을 받아들일 것을 주장하고 있음.
- ECB 관계자들은 이 같은 채무 탕감이 발생할 경우 심각한 대차대조표 훼손으로 인해 ECB의 신뢰가 저하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보유 중인 그리스 국채와 관련한 손실 분담을 확고하게 반대하고 있음.
- 독일 기민당 원내 부대표 미하엘 마이스터 의원도 채무 탕감 조건을 받아들이는 것은 민간 채권단의 이해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ECB의 그리스 국채 손실 분담 합류에 반대하였음.

- 하지만 ECB가 보유한 400억 유로의 그리스 국채도 그리스가 채무 불이행 상태에 처하면 타격을 받을 수 있어 점차 높아지는 손실 부담 압박을 이겨낼 수 있을지는 불확실함.
- 또한 그리스 정부가 현재 채권단 내 절대 다수가 합의(안)에 동의할 경우 나머지 채권단도 의무적으로 국채 교환에 응하도록 하는 집단행동조항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도입되면 ECB 보유국채도 교환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FT, Reuters, Bloomberg 등, 1/26)